'인보사 사태'에 불똥 튄 증권사

주관사에 해외기술 특례상장 불허… IPO 빙하기오나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사 2곳
성장성 특례 등 상장사자격 제한
소액주주 300여명, 손배소 제기

〈상반기 기술특례 코스닥 상장사〉 (단위 : 원)

종목명	업종구분	상장일	공모규모	주관사
이노테라피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2019.02.01	9,000,000,000	대신증권
셀리드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2019.02.20	39,600,000,000	삼성증권
지노믹트리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019.03.27	108,000,000,000	키움증권
수젠텍	의료용 기기 제조업	2019.05.28	18,000,000,000	한국투자
마이크로디지탈	의료용 기기 제조업	2019.06.05	16,100,000,000	하나금투
압타바이오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2019.06.12	65,400,000,000	삼성증권

한국거래소(KRX)가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상장 주관사에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는 해외 기업 기술특례로 문제를 일으킨 상장 주관사에게 주관업무를 제한키로 하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상장주관사에 '책임'…IPO 위축 우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다. 아울러 내년 11월까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해외 바이오 기업의 기술특례상장과 성장성 특례 상장 주관사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사였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달 거래소가 마련한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해외 기업 기술특례 상장주관사는 최근 2년내 해외 기업 기술특례 기업이 관리종목, 상장폐지,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으로 지정되는 등 부실기업 주관 실적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달았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고 2년이 지나지 않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됐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된 3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 11월까지 외국 기업 기술특례 및 성장성 특례 상장 주관을 할 수 없게 됐다.

두 증권사는 또 단체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를 대리해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비롯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약 300여명의 소액주주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에서는 상장 주관사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무리하다는 의견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식약처 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안을 주관사가 미리 알지 못했다고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기술특례기업이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상장 주관사의 명백한 실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는 등 제한 요건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의 소송 건에 대해서도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소송을 남발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면서 "고소인들이 증권사 공모주 청약을 통해 들어온 투자자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본인의 투자판단 하에 투자를 한 주주들까지 상장주관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 기술특례 등 유망기업 상장 위축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시장에는 총 18개 기업이 상장했다. 공모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기술특례를 통한 상장사가 7개사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IR큐더스 관계자는 "올해 기업공개는 무형자산 중심의 유망 기업들이 상장했다"면서 "덕분에 신규 상장기업의 업종이 상당히 다변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티슈진 사태로 기술특례 상장 주관사의 부담이 커진 만큼 IPO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관사는 '테슬라 요건', '성장성 특례' 등의 경우 '풋백옵션' 의무를 가진다. 풋백옵션은 IPO 이후 주가가 부진하면 주관사가 일반 청약자의 주식을 일정 조건으로 되사주는 제도다. 이같은 부담과 더불어 상장사에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주관사의 책임을 묻는다면 증권사 입장에서도 기업 발굴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은 기술 특례상장, 테슬라요건 상장, 사업모델 기반 특례상장 등 적자기업이어도 기술력이 있거나 독창적 사업모델을 갖추면 기업공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상장 문턱을 낮춰왔다"면서 "이번 제재가 '외국 기업의 특례상장'에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언제는 주관사의 상장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면서 기술특례 상장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상장을 준비중인 해외 기업은 미국 소마젠, 아벨리노랩, 네오이뮨텍(NIT) 등이 있다. 이들은 기술특례 상장으로 기업공개에 나설 계획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물놀이로 더위 날려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인 7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올 수능 11월14일… 한국사 응시 필수

평가원, 2020 수능 세부계획 공고
영어영역·한국사영역 '절대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올해 11월 14일 시행되는 수능시험은 학교 교육을 받고, EBS로 보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한다고 7일 밝혔다. 평가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되고, 지난해 처럼 수능이 끈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성취기준 공개는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EBS 교재·강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문항 수 기준으로 70%이다.

영어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해야하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올해 시험지부터는 성명·수험번호 기재란 옆에 '제 ( ) 선택' 처럼 해당 과목이 몇 번째 선택과목인지 기재하는 항목이 새로 생긴다. 제2선택을 먼저 풀었다가 제1선택 답란에 잘못 표기해 불이익을 받는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4교시 탐구영역 OMR 답안지에도 제1선택 과목 답란과 제2선택 과목 답란을 다른 색으로 인쇄해 수험생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8월22일~9월6일까지 12일간 진행되고, 성적통지표는 12월4일까지 배부된다.

/한용수 기자 hys@

"비례대표 원치않아"… 장관직 완주 의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오는 11월 말까지 임기 유지땐
역대 최장수 금융위원장 재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대표 출마설 등으로 저를 비겁한 사람으로 몰아 깎아내리지 말아 달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례대표를 희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악의적인 보도로 저를 비겁한 사람으로 몰지 말라"며 "과분하게 중요한 직책을 이만큼 했으면 됐지 지금 또 다른 공직을 노린다는 건 저한테 맞지 않다"고 했다. 지난 5월 이후부터 제기된 총선 출마설을 우회적으로 부인한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 위원장이 지역구 출마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한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복합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국회의원 하려면 내 고향(강릉)에서 해야지 (비례대표) 절대 일어날 일 없다"고 말해 일부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대해 금융위 안팎에선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최 위원장의 호흡을 맞춰야 하는 손병두 부위원장이 취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데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금융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제3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이었지만 신청자들의 자격미달로 실패했다. 올 하반기 전문은행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장이 바뀌면 순조로운 출범을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당초 3분기에 신청 받아 4분기에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10월까지 조금 더 연장해 신청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이 오는 11월 말까지 금융위원장직을 유지하면 바로 직전 위원장인 임종룡 연세대 특임교수를 제치고 역대 최장수 금융위원장 재임 기록을 세우게 된다. 최 위원장은 이달 말 취임 2년째로, 임 교수는 지난 2015년 3월 취임해 2017년 7월까지 정확히 2년 4개월을 채우고 최 위원장에게 자리를 넘겨줬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일본 경제보복 관련 금융시장 동향,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대출 회수 등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국내 은행·기업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일본이 쓸 가능성 있는 금융 조치로) 대출금 회수, 자본시장 투자 회수, 송금 제한 등이 있지만 이 중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며 "기업의 엔화대출도 짚어봐야겠지만, 중단되더라도 다른 보완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국내 금융기관이 어디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경제가 안정돼 있고 금융기관 신인도도 높아서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관측했다. 그는 "경제여건과 대출규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볼 때 통화정책은 한계가 있고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쌀이 얼마 안 남았으니 먹지 말고 굶어 죽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쌀을 먹고 힘을 내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